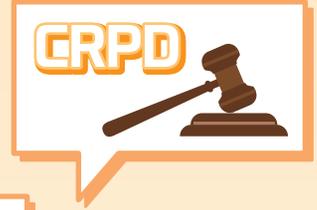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올해 장애계 이슈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4.11.25. _ Vol.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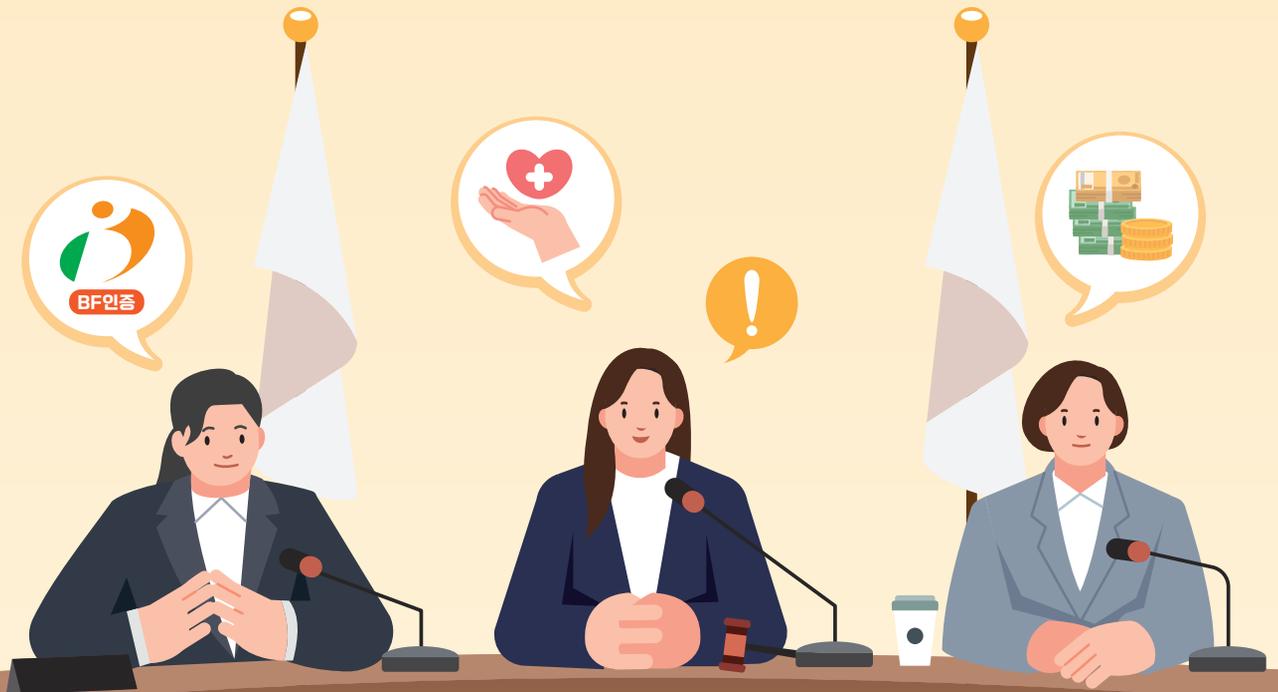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한국산재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올해 장애계 이슈는?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세은

지난 4월,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장애인 비례대표는 3명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다뤄보고자 한다. 또한, 국정감사의 정의, 22대 장애인 비례대표의 인터뷰,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장애계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01 국정감사의 정의

■ 국정감사의 의의¹

-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화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임
- 헌법 제61조제1항에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하고, 국회법 제128조 및 129조에 구체적인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정감사 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증거의 수집을 보장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988년 제정)에 따라 국정감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 의해 국회는 국정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국정조사를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함

■ 국정감사의 절차

- 국정감사의 절차로는 준비단계, 실시단계, 국정감사 결과 처리단계로 볼 수 있음

준비단계	① 국정감사의 시기결정 ②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 ③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의 확정 ④ 국정감사사무보조자 선임 및 국정감사 출장준비 ⑤ 보고·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 송달 등
------	---

실시단계	①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② 증인 등의 선서 ③ 감사대상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④ 보고 및 질의·답변 또는 신문·증언 ⑤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국정 감사결과 처리단계	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제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제출) ② 국정감사결과 본회의의결 ③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정부 등 이송 ④ 위증증인 등 처리 ⑤ 정부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접수 ⑥ 시정 및 처리결과에 소관위원회 회부

- 국정감사의 실시기관으로 주체는 국회이지만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하도록 하고 있음.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과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인 본회법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1988년 6월 15일에 개정된 국회법과 그 해 8월 5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됨

■ 국정감사? 국정조사?

-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정사안 전반을 조사하는 경우는 국정감사로 보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국정조사로 구분함
- 세부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는 반면, 국정조사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조사함. 둘째,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반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시행함. 셋째, 국정조사의 경우는 조사요구위원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

¹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정보

제한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는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함. 그러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한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함. 넷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국정감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선정되지만 국정조사 대상기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섯째, 국정감사 기간은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되어있으나 국정조사는 법정 기간이 없고 조사계획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행해야 함. 국정감사는 연장이 불가능한 반면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국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통과시키는 등 장애인관련 법안 제개정을 위해서는 장애인비례대표의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됨
- 이에, 장애계는 “장애총선연대”를 결성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비례대표제²를 통해 정치권 입문에 앞장서고 있음
- 22대 국회는 장애인비례대표 3명이 출범하고 그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음

02 22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에게 듣는 국정감사

22대 첫 국정감사 실시

- 22대 국회 국정감사는 2024년 10월 7일을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시행함
- 21대 첫 국감 당시 여·야 초선의원들이 ‘중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후반기에는 호지부지 됨. 이번 22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중이 없는 국정감사’를 실천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량의 자료를 전자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함

장애인비례대표들의 중요한 역할

- 15대~21대 국회에 장애인 비례대표는 총 12명
- 17대 국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8대 국회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통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19대 국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21대

장애인비례대표 3인, 첫 국정감사 마치며

- 김예지 의원은 21대에 이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추진하고자 하고, 최보윤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국내이행을 장애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음. 서미화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김예지 의원 (국민의 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 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	-----------------------------------

Q1 첫 국정감사를 주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공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김예지 의원 국정감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때문에, 실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개인예산제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이슈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법 제도의 문제점, 사각지대에 놓여있

2 비례대표제도: 정당의 총 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요청을 위해서 콜라겐, 소화제, 클렌징밤 등을 실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 **최보운 의원**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 소관 분야의 주요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보좌진들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각 기관별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질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서미화 의원** 무거운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국정감사였습니다. 민생을 살피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감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또 국정감사 시기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가 겹치게 되어 다른 의원님들보다 조금은 더 바쁘게 보냈던 듯합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과 당원들께서 좋게 봐주셨고, 그 응원에 힘입어 두 가지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듯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번 경험을 살려 더욱 국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국정감사였습니다.

Q2 김예지 의원님은 21대에서도 비례대표로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셨었는데, 또 한 번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시는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21대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예술인 지원 3법' 대표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할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진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다 포괄적인 장애인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보장 등 아직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많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임기 내 내실 있는 성과를 내고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헬스경향

Q3 많은 이슈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셨던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장애인 학대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신고 건수는 4,958건으로 2018년 3,658건 대비 35.5%나 증가했습니다.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적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했습니다. 학대피해 장애인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슈화와 대응체계 마련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옹호체계, 실효성 있는 처벌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다시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최보윤 의원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국내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 국제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비준 이후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국가 차원의 홍보나 국민적 관심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원실에서 19개 정부 부처의 협약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9개 모니터링 항목 중 실제 이행률이 13.8%에 불과해 협약의 실질적 이행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보윤 의원/최보윤의원실

장애인의 권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가 아닌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협약과 상충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미화 의원 모든 게 중요하지만, 이동권 보장이 그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이슈라 보입니다. 관련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발의했었지요. 이 법은 저의 1호 법안이자 22대 국회의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모든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위해 당사자로서 시급함과 절박함을 담아 발의했습니다. 이

동권 보장은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광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확립하고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장애인권과 관련한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고, 절실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이동권 보장은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한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달 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 발의뿐만 아니라 통과하여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Q4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임기 내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예지 의원 모두 중요한 과제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과제들은 임기 내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삶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이지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 사각지대,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만큼 장애노인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윤 의원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 핵심 내용인 장애주류화입니다. 장애주류화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특히 정책의 초기부터 일상적으로 장애인지적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장애영향평가 등 구체적 제도 추진을 위한 복지부 내 인력 배치를 촉구하였고, 지난 9월20일 장애인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계획안을 마련하여 준비 중이라는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서미화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권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 전반을 다루며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문제를 짚어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환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책 기조인 ‘약자복지’의 실체를 국민들께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의료급여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개편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전혀 약자복지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의원 임기 1/3 가량이 지났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외치고 있는 약자복지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파헤치고, 국가의 본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5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김예지 의원 국정감사 중 참고인으로 모신 장애

노인 당사자분은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고 보전급여 형식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더해 그다음 달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단지 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활동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행정편의주의적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반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분께서는 본인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국회에 직접 나와 증언하시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알리기 위해, ACC 방식과 육성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언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국회의원으로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보윤 의원 이번 국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AI기반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시연이었습니다. 첨단 보조기기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 실질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보조기기 분야는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한 음성 제어 스마트홈 시스템은 이미 일상에 자리 잡았고, 근전도 센서와 AI기술이 결합된 로봇 의수·의족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기기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장애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보조기기들의 공적 급여화 과정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더디지만 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첨단 보조기기들이 공적 급여 품목에 원활히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국감을 진행하며 각 부처에게 긍정

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던 의제들이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문제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니까요. 그중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장관이 동의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 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방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성폭력, 불법촬영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횡령 수준의 보조금 부정사용이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스물 여섯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단 한 건만 시설장 교체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개선명령에 그쳤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이 289건이었지만 그중 폐쇄 처분은 24건에 그쳤고, 대부분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복지부 장관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도의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 국정감사의 진정한 역할인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국정감사 스코어 최상위에 선정되며 “일관되게 약자를 향한 시선을 잃지 않으면서도 야당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질의를 진행”했다는 코멘트를 받은 것도 뜻깊었습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 분명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오마이뉴스

Q6 장애계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계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장애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체 간 협력과 함께 구체적인 제안이 계속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필요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계 내부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구를 제시해 주신다면,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최보윤 의원**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구체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 입성 이후 항상 열린 자세로 장애계의 의견을 경청해 왔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언제든지 의원실을 방문하셔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렴된 의견들은 장애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미화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 위원장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공약으로 지방선거 장애인 후보자 세력화와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정치 아카데미 운영 및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10만 장애인 당원시대를 열어 당원과 함께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시대와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도 말씀드렸었지요. 제도 내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는 없지만, 또 제도 내에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장애당사자와 장애계가 요구하는 권리가 실현되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국회를 더욱 귀찮게 하고, 괴롭혀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국회 안에서 언제나 함께 싸우겠습니다.

Q7 향후 활동 계획 및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 **김예지 의원** 저는 ‘모두 함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구분되지 않고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장애인이 ‘모두’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보윤 의원** 저의 명함 뒷면에 ‘가장 낮은 곳의 가장 밝은 등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 의정활동의 지향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석 구석까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밝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서미화 의원** 국회에 오기 전 기초의원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에서 장애인 운동 활동가로 살아왔습니다. 지역에서 장애여성을 비롯한 장애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없었더라면 목포시의원 서미화도, 국회의원 서미화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제도의 바깥에서 누군가를 움직이게 해 왔다면, 지금은 잠시 제도 안으로 들어와 직접 행동하게 된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 들어오며 했던 목표 그대로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시대’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종국적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이 되어 남은 임기를 보내겠다고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그 길에 장애당사자 동지들이 함께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03

22대 국회, 국정감사 장애계 주요 이슈들

2024 언급된 주제

- 고령장애, 서비스 지원체계, 건강권, 편의시설 및 정보접근, 문화·교육·체육, 인권, 경계선장애인 등의 이슈

고령장애

1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참여 제한 규정 폐지 필요 (서미화 의원)

(배경) 장애인 인구 중 만 65세 인구 비율이 54%로 장애노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노인’으로 간주되어 박탈당하고 있음
(지적사항) 고령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식의 이분법적 접근에 탈피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참여 제한을 폐지해야 함

2 중증장애인 조기노화로 노령연금 조기 수령 필요 (김예지 의원)

(배경)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통계청, 2022년)세에 한참 미치지 못함
(지적사항)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 의미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1 활동지원사의 업무 범위 확대 마련 필요 (김예지 의원)

(배경) 현행법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는 업무에 관한 활동지원서비스나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지적사항) 소규모 5인 미만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한해 기존 활동지원 제도를 생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현재 시범사업 중인 1인 장애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업무지원인’제도의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함

2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예산 확보 필요 (김동아 의원³)

(배경)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근로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속하지 않는 1인 중증장애인들의 업무지원을 위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지적사항) 전체 1인 중증장애인기업(올해 추산 13,033개) 중 0.3%만 지원을 받음. 내년 정부 예산안에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예산을 즉시 반영하고,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자립 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

3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보장 필요 (김예지 의원)

(배경)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만 65세에 도달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인정되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강제 전환됨. 장애인 일자리도 탈락되고 활동지원시간도 현저히 줄어듬

(지적사항) 서비스 감소분을 보충해주는 보전급여가 있지만 기존 활동지원 시간에 미치지 못함. 대법원에서도 강제 전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 만 65세 도래자 중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장

애인은 매년 약 30%에 불과함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함. 또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중 장기요양 수급으로 중도 퇴사 처리된 사람은 매년 전체 참여자 대비 평균 0.04%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일자리 참여를 유지해도 예산상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함

4 활동지원 종합조사의 내실화 요구 (김예지 의원)

(배경)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등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적정 급여량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인의 지원 욕구를 파악하는 도구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 및 양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함

(지적사항) 활동지원 종합조사가 당사자에게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조사임에도, 담당 직원 35.5%가 업무경력이 없거나 1년 미만임. 2인 1조 방문조사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음. 복잡하고 어려운 조사임에도 경력이 없는 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5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AI 기반 보조기기’ 등 신기술 적용한 보조기기 공적지원제도에 포함 필요 (최보운 의원)

(배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고 있음.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이 있지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위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가 지급됨

(지적사항) ‘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수동식 휠체어

3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 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 기기를 부착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보조기기로 수동휠체어 사용으로 인한 어깨와 손목 통증과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음. 그럼에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IOT 등 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욕구가 있는 보조기기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법제화에 따른 예산 지원 촉구 (서미화 의원)

(배경) 2023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IL센터 법제화'가 골자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함
(지적사항)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당시 복지부는 245개나 되는 IL센터들을 위한 국비를 다 확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을 1년 6개월 미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 예산 없이 복지시설화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지적함



오른쪽 서미화 의원/국회방송

7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 전환촉구 (최보윤 의원)

(배경) 2022년 5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임.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적사항)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시 당사자 서비스 만족도가 90.7%에 달하고, 금전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용자 만족도와 사업 수 등을 고려하여 우려 사항을 보완하여 조속히 본사업이 추진돼야 함

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참여율 저조 (최보윤 의원)

(배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낮활동과 주거지원의 '24시간 개별 1:1 지원', 개별형 낮활동 중심의 '주간 개별 1:1 지원', 그룹형 낮활동 중심의 '주간 그룹 1:1 지원'으로 구성됨

(지적사항) 2024년 서비스 지원 목표 인원인 2340명 중 11%에 해당하는 259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점점 강조함

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신청시 거의 1년간 대기로 자립지원에 어려움 발생 (최보윤 의원)

(배경)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지적사항)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까지 마쳤음에도 이수자 중 법정대리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고, 후견인 발굴과 매칭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함. ▲공공후견인 신청 대기자 수 줄이는 방안 ▲공공후견인 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전환 방법 개발 ▲후견인 양성교육과정 속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교육 내용 보충 등을 주문함

장애인의 건강권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인간 존엄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져야 함. 이에 2015년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개선책 필요 (서미화 의원)

(배경)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함.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26년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 (지적사항) 당연지정 공공병원 85개소 중 65개소는 필수 장비 9종 중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각 부처가 다르고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이 있지만, 필수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2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체계 개선 요구 (김예지 의원)

(배경)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며, 2018년 5월부터 시작되어 6년째 진행 중임 (지적사항) 4차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장애인들의 호응을 받는 제도지만, 병원에 휠체어 접근이 되지 않는 등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활동하는 주치의가 14.7%로 저조함. 노인 요양 관련 재택의료센터와 수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 요구함. 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작업치료사, 건강관리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팀 구성이 필요함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정보접근

장애인은 사회 환경적 요인에서 차별을 겪게 됨. 이동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7년)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 소규모 공중시설 접근성 전수조사와 면적 기준 폐지·경사로 설치 지원 계획 질의 (최보윤 의원)

(배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적사항)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2022년 동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50㎡라는 면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지적함. 편의점 등 편의시설 의무 대상 면적 제한 폐지나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경사로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질의함

2 민간 BF인증제도 실적 저조 (김예지 의원)

(배경)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장애인등 이동 및 접근에 취약한 대상자들은 원활한 건물출입과 정보 접근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함 (지적사항) 다른 인증제도를 보면, 건축물의 용적률, 최대 높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음. 배리어프리 인증 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장애인의 고용 및 소득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 등을 시행하며 장애인고용 확대를 통해 자립을 지원함

1 정부·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대책 시급 (정태호 의원⁴⁾)

(배경) 정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지난해 기준 의무고용률은 3.6%, 올해는 3.8%. 정부부처의 연도별 고용부담금은 2019년 45.4억 원, 2020년 88.2억 원, 2021년 113.1억 원, 2022년 168.3억 원,

4 정태호:더불어민주당(관악구 을)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208.0억 원으로 5년간 4.6배 증가함
(지적사항)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장애인고용에 나서야 함



정태호 의원/연합뉴스

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4.5배가 많고, 부상 위험 큼.
장애인 선수들은 10년 이상 국가대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고질적인 부상도 많을 것이라 지적함



김윤덕 의원/김윤덕의원실

2 국립대학병원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에 달성 못함 (김문수 의원⁵)

(배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지적사항) 국정감사 대상인 14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중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대학병원들은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함

장애인 문화 · 교육 · 체육

1 장애인국가대표 이천선수촌 상주 의사 부재 (김윤덕 의원⁶)

(배경)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촌에 상주하는 의료 관련 인력은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이 전부인 상황임
(지적사항)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해 보면, 근

2 장애인국가대표팀 트레이너에 관한 차별적 정책이 존재함 (양문석 의원⁷)

(배경) 장애인국가대표팀을 지도하는 국가대표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있음. 그러나 비장애인 체육과 급여 차이가 큼
(지적사항) 2024년 기준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 급여는 월 175만 원 수준임. 대한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월 305만 원으로 격차가 큼. 비장애인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월급제’, 장애인대표팀 트레이너는 ‘수당제’로 이런 격차는 장애인대표팀 트레이너의 고용불안을 부름

장애인 인권

1 장애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질적 운영 방향 질의 (최보윤 의원)

(배경) 최보윤 의원은 장애평등 정책의 실질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장애영향 평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장애평등정책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함
(지적사항) 장애영향 평가 시범사업의 실질적 운영 방향을 질의하여 복지부 내 장애영향 평가제도 도입 추진단 운영 중이라는 답변을 받음

5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김윤덕: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2 구치소·교도소 수용 장애인의 권리구제 제대로 작동 위해 인권위 면밀한 조사 필요 (박성준 의원⁸)

(배경) 교정시설 내 장애인은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 소장면담, 청원, 인권위 진정, 소송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지적사항) 인권위에 최근 5년간 접수한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 관련 진정 사건 198건 중 권리구제된 사례는 19건으로 낮은 수준. 장애인 수용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인권위는 면밀히 조사해야 함

3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 실태조사 파악 미비, 모니터링 및 처벌 체계도 부재 (서미화 의원)

(배경) 정신병원 내 입소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격리·강박을 자행함

(지적사항)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는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처벌하는 체계도 부재함.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함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최보윤 의원)

(배경)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발달장애인법의 핵심 전달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당사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회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음

(지적사항)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회의 자료 제공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의 기본 조건이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자가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임. 당사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최보윤 의원/최보윤의원실

5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학대받지 않도록 예방교육 강화 필요 (서미화 의원)

(배경)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폭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지적사항) 최근 구례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학대를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 경력 2년이면 활동지원사 장애인 예방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현황을 지적함. 학대당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실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요구함

장애아동 그 외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 격차 문제, 소득기준 신청자격 폐지 필요 (최보윤 의원, 김예지 의원)

(배경)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에 근거하고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임 (지적사항) 최보윤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단가’와 정부 ‘바우처 지원금’의 격차가 크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제안함. 현재 ‘서비스 단가’ 상승과 ‘바우처 지원액 기준단가’ 간의 격차 확대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김예지 의원은 가구 소득 변동으로 인해 발달재활

⁸ 박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이 매년 1천여 명씩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함. 성장하는 아동에게는 필요한 감각을 익혀 성인이 되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서 소득 기준 신청자격을 폐지를 강조함



왼쪽 김예지 의원/국회방송

염병으로 조정되기 전날인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정보를 수집함 (지적사항) 질병관리청이 장애 인구 통계를 별도로 취합하지 않는 건 장애 인구를 팬데믹의 위험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음.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감염자 현황 통계에 장애 인구 분리 통계가 반드시 반영돼야 코호트 격리 같은 반인권적 조치로 장애인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04 2024 국정감사를 마치며

- 2**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은둔 문제 (안상훈⁹ 의원)**
 (배경)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있는 이들로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에서 비장애인으로 간주됨. 장애 지원이 되지 않아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으며 전체 인구의 13.59%(약 700만명) 정도로 추산됨. 이들의 사례는 잦은 취업 실패와 실직으로 인해 청년 은둔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음 (지적사항) 경계선 지능인이 고용에 대한 교육을 지원받고, 실제 고용이 이뤄지기까지 사회복지사와 사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함
- 3** **장애인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서미화 의원)**
 (배경) 질병관리청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

- 22대 첫 국감,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올해 한국장총은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 정책 마련 촉구 활동,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개인예산제 등) 요구 활동,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서비스 요구 정책 활동, 소수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 요구 활동정책과제와 같이 5대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위한 간담회, 세미나, TF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장애인단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장애계는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사항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법과 제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견을 피력해야 함

⁹ 안상훈: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장애 시민의 일상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복지TV YouTube

장애인의 아고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아고라'를 통해 2016년부터 다양한 개성의 장애당사자들을 패널로 섭외하여 일상생활 경험을 나누고,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시민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장애인 아고라'는 복지TV 방송과 youtube 장애인아고라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